

AI 반도체 가격 폭등… 스마트폰·노트북 가격 인상 불가피

CES서 IT기기 가격 인상 예고
삼성·LG, 노트북 가격 50만원 상승
고환율 여파로 소비자 물가 부담 가중
상반기까지 가격 인상 지속될 전망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주요 IT기기 가격 인상을 불러오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6년 1월 기준 DDR5 등 고성능 메모리 가격은 30만원선까지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여기에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원화 가치 하락 현상도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2026년형 노트북 ‘갤럭시 북6’ 시리즈 가격은 341만원부터 시작한다. 프로 모델 기준 14인치 241만원, 16인치 351만원이다. 전작인 갤럭시 북5 프로 시리즈가 176만



삼성전자 모델이 갤럭시 북6 프로를 소개하고 있다.

8000~280만8000원이었다. 특히 갤럭시 북5 시리즈가 갤럭시 북4보다 최대 18만원 인화된 가격으로 출시된 점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 폭은 더 크다는 지적이다.

LG전자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형 노트북 ‘LG 그램 프로 AI 2026’의 16인치 출고가는 314만원으로 비슷한 사양을 적용한 전작보다 50만원 가량 가격이 인상됐다.

고환율도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인텔,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수입한다는 점에서 가격 부담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IT 기기의 가격 인상은 노트북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급등과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로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5일



LG 전자 26년형 그램.

CES 2026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부품 재료비,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우려”라며 “제품 가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상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S25의 가격을 동결(일반 115만5000원·플러스 135만3000원·울트라 169만8400원)했지만 내달 공개할 갤럭시 S26 시리즈의 가격은 전작 대비 일반 모델은 약 10만원, 울트라 모델은

약 15만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도 올해 출시하는 아이폰 18 프로와 맥스 라인업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7 일반·프로맥스 모델은 출고가를 동결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상반기까지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가 전년 대비 최대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026년은 메모리 부족 여파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조사들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SK, 마이크론 등 수출 개선을 통해 AI 메모리와 범용 메모리 생산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폭발적인 메모리 수요가 전체 산업 공급 능력을 넘어서는 상태”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과 함께 제품 품귀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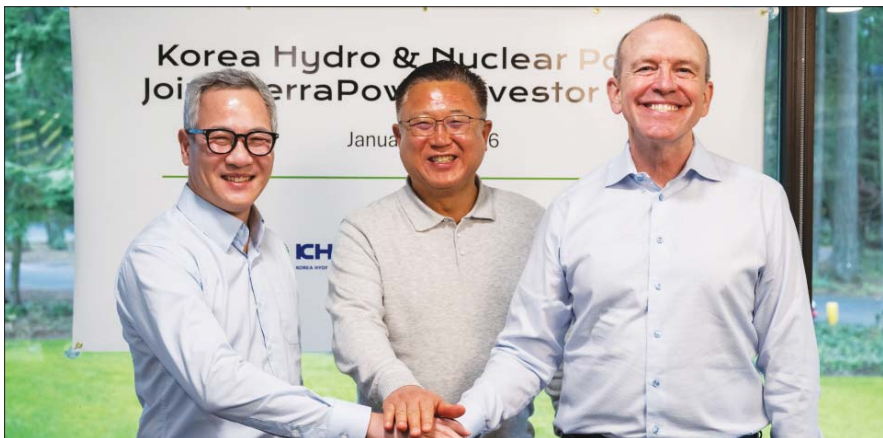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이노, 테라파워 지분 매각… 글로벌 SMR 시장 공략

한수원, 첫 공기업 SMR 참여
테라파워, 나트롬 SMR 기술 개발
3자 협력, SMR 사업 본격 추진
SMR, 전력수요 급증 대응 가능성 ↑

SK이노베이션이 보유 중인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테라파워 지분 일부를 한수원에 매각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세계적 SMR 개발사에 직접 투자한 첫 사례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테라파워 지분 인수와 관련한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TUS) 심사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SMR 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SK

이노베이션은 21일 보유 중이던 테라파워 지분 일부를 한수원에 매각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세계적 SMR 개발사에 직접 투자한 첫 사례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테라파워 지분 인수와 관련한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TUS) 심사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SMR 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SK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사업단장(왼쪽부터)과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테라파워 본사에서 SMR 협력 미팅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과 SK(株)는 2022년 8월 테라파워에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랐으며 이번 일부 지분 매각 이후에도 2대 주주 지위는 유지한다.

3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글로벌 SMR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

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소재 분야의 글로벌 사업 경험을, 한수원은 원전 건설·운영 노하우를, 테라파워는 차세대 SMR 기술력을 맡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에너지 설루션을 제공한다 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과 한수원, 테라파워는 2023년 4월 ‘SMR 개발 및 실증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지분 참여를 계기로 미국 및 해외 SMR 건설, 국내 SMR 도입을 위한 사업화 본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차세대 원전 개발 기업으로, 기가와트급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결합한 나트롬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 최초 상업용 나트롬 SMR 플랜트를 건설 중이다. 첨단 기술력과 높은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테라파워 SMR은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SMR은 모듈형 설계를 기반으로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역·단계

별 증설이 가능해 전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테라파워의 나트롬 SMR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발전량을 조절하는 부하 추종 운전이 가능해 재생에너지와의 보완적 시너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를 단순 협력을 넘어 전략적 투자로 보고 있다. 지분 투자를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IP)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원전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 IP 확보는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과거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분 참여는 향후 원전 수출과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권리 이슈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고영향 AI’ 기준 모호해 기업 불확실성·부담 가중

인공지능 기본법
〈下〉산업계 ‘이중 규제’ 우려

기업 혁신 속도 저하시킬 가능성
기술 발전 속도와 맞지 않는 규제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정부는 이를 산업 진흥과 신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의 작동 방식과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식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AI 기본법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

2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산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AI 기본법이 추상적 개념과 포괄적 규제에 기대 설계되면서 기업 활동 전반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핵심 규제 장치로 꼽히는 ‘고영향 AI’ 개념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서 정의하는 고영향 AI는 국민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 보건의료, 범죄 수사, 채

용, 대출 심사, 교통 등 10개 영역을 고영향 AI 적용 분야로 지정했다.

문제는 무엇이 ‘중대한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치화된 기준 대신 영역별 질문지를 담은 ‘흐름도’를 통해 종합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입장에서서는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다. 오작동 시 피해 규모나 인공지능의 독자적 판단 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기업 경영 환경에서는 이러한 추상적 잣대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순간, 사업자에 부과되는 부담은 급격히 커진다. 해당 서비스 AI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는 물론,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과 인적 감독 체계 마련 등 비용 부담이 큰 안전성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이미 다수의 개별 법령에 따라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군은 AI 기본법까지 더해지며 ‘이중 규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역시 여전히 미해결 과제다. 대규모 학습이 필수적인 AI 특성상 저작물 활용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현재로서는 ‘선 활용, 후 협상’ 방식 외에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창작

자와 기업 간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안은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해외 기업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규제라기보다 간접적인 관리에 그친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 기업은 법 조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표시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하는 반면, 해외 기업은 대리인을 통해 규제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비껴갈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유통 등 해악 발 리스크에 대한 실효적 대응은 부족한 채, 국내 기업만 규제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서현 기자 seoh@